

就業難과 대학의 危機

申 鉉 直
(啓明大 公法學科)

지금까지 大學의 危機에 관한 얘기들은 많았다. 물론 그것은 모두다 대학의 위상과 대학교육 현실의 문제에 입각한 것이긴 하였으나 제정적 위기, 내부 구성원의 갈등, 학제적 모순, 학생운동 등 밖으로 드러난 문제들이 주종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특히 就業難과 함께 최근에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현상 하나를 얘기하면서 좀더 새로운 각도에서 대학의 위기를 보고자 한다.

대학생들의 취업난 문제가 올 가을에도 연례행사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과거와 다른 것은 취업난의 문제가 이제는 대학교육 자체를 심각하게 침식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졸업예정자에 대한 採用試驗을 졸업도 하기 전 2학기 중간에 실시함으로써 4학년 2학기의 강의를 반 이상 좀먹어 들어온 것은 이미 상당히 오래 전의 일이다. 작년부터는 드디어 시험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학기중에 사실상 고용하는 소위 인턴社員制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에 이르렀고, 금년에는 학생들이 아예 2학기 수강신청부터 전공과목과는 관계없이 학점따기 편한 과목으로 바꾸어버려 專攻講座開設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까지 왔다. 또한 취업을 위한 성적이 4학년 1학기까지의 것이므로 그러한 현상은 이미 4학년 1학기에까지 파장이 미치고 있다.

대학졸업자의 취업문제는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례행사처럼 잠시 매스컴에서 심각하다고만 떠들 뿐 정부당국이나 언론, 대학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전혀 없거나 불가능한 상황이고 보면, 학생들의 그러한 自救策은 생존의 몸부림으로서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그들의 태도를 탓하기 전에 정부당국은 물론 우리 대학들이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를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껏해야 자기 대학, 자기 학과의 학생 몇 명을 개인적인 친분을 들어 취업시키려 외관사원처럼 뛰거나 하는 수준 이상의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를 곰곰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대학은 대학으로서 가르치면 되며 취업준비는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란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대학강의를 기초로 스스로 준비하는 취업준비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다. 專攻은 필요없고 英語만 잘하면 된대거나, 전공과 관계없이 學點만 잘 딸 수 있으면 무슨 강의를 듣든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간 대학 신입생들은 객관식의 암기식 공부에만 주로 매달려온 습관으로 인하여 대학교육에 필요한 기초적인 서술능력이나 교양적인 지식, 사회에 대한 기초적 이해 등이 매우 부족하여 사실상

대학 1학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게다가 이제 4학년 교육마저 취업이라는 현실 때문에 상실되고 있다. 대학생할 4년 중 2년을 高校教育의 後遺症 治療와 취업경쟁을 이유로 한 企業利害 때문에 침식당하고, 나머지 2년 동안 그나마도 140 학점의 제한 속에서 어떻게 교양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단 말인가?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學點의 上向調整을 요구하지만 학교당국이나 사학계단에서는 돈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며, 그나마도 현실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으로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大學入試란 대학교육을 받을 준비와 자질을 심사하여 선발하는 과정인데 우리의 입시제도는 과연 그러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유능한 專門人力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기업들이, 그들이 원하는 인재들을 교육시키는 대학기관에 투자하기는커녕 타기업과의 채용경쟁과 기업이익 때문에 教育期間마저 침식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에의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재정위기 또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당국의 대책도 없고 대학의 자주적인 노력조차 부족한 상황의 대학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地方私立大學들, 그 중에서도 개인이 지배하는 대학, 대학 구성원들의 지지와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합리적인 학사운영을 하지 못하는 대학들에서는, 도리어 대학의 제정난을 핑계삼아 현재의 예산 중에서도 교육에 필요한 부분을 축소시키는 명분으로 삼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조국을 부르짖는 [정부당국은 대통령선거에 앞선 선심으로 쥐꼬리만한 財政支援의 인상안을 갖고 생색내기에 급급하다. 더구나 大學評價制란 것을 도입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각 대학으로 하여금 경쟁적인 자구책 마련을 위한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뒤쳐지는 대학은 도태시키겠다는 취지인지를 묻고 싶다. 대학은 돈 없으면 망해도 좋은 個人的 營利企業이 결코 아니다. 학문과 교육은 國家의 책임이요 의무다.

지금까지 대학의 위기는 재정적 어려움 또는 내실있는 교육의 어려움 등의 문제였다면, 오늘날에는 대학 存立自體의 위기, 즉 大學破綻의 위기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인 人力需給政策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대학재정 지원액의 대폭 증액과 함께 기업투자여건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中等教育을 대학교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기업의 대학교육 침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企業은 專門領域에서 대학과의 관계를 좀더 긴밀히 하면서 채용시험이나 성적반영에서 전공비중을 높이기도 하고, 또한 채용시험 자체를 겨울방학 때로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요청된다. 대학 또한 과거의 중앙집권화로부터의 分權化와 自治制를 의미하는 민주화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학내 구성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과 아울러 폭 넓은 학사참여의 길을 제도화함으로써 사회가 요구하는 專門人力教育을 위한 대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